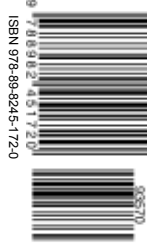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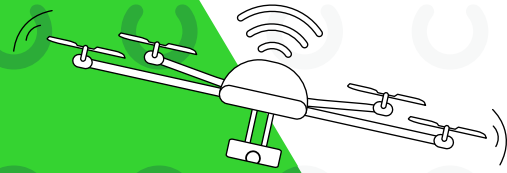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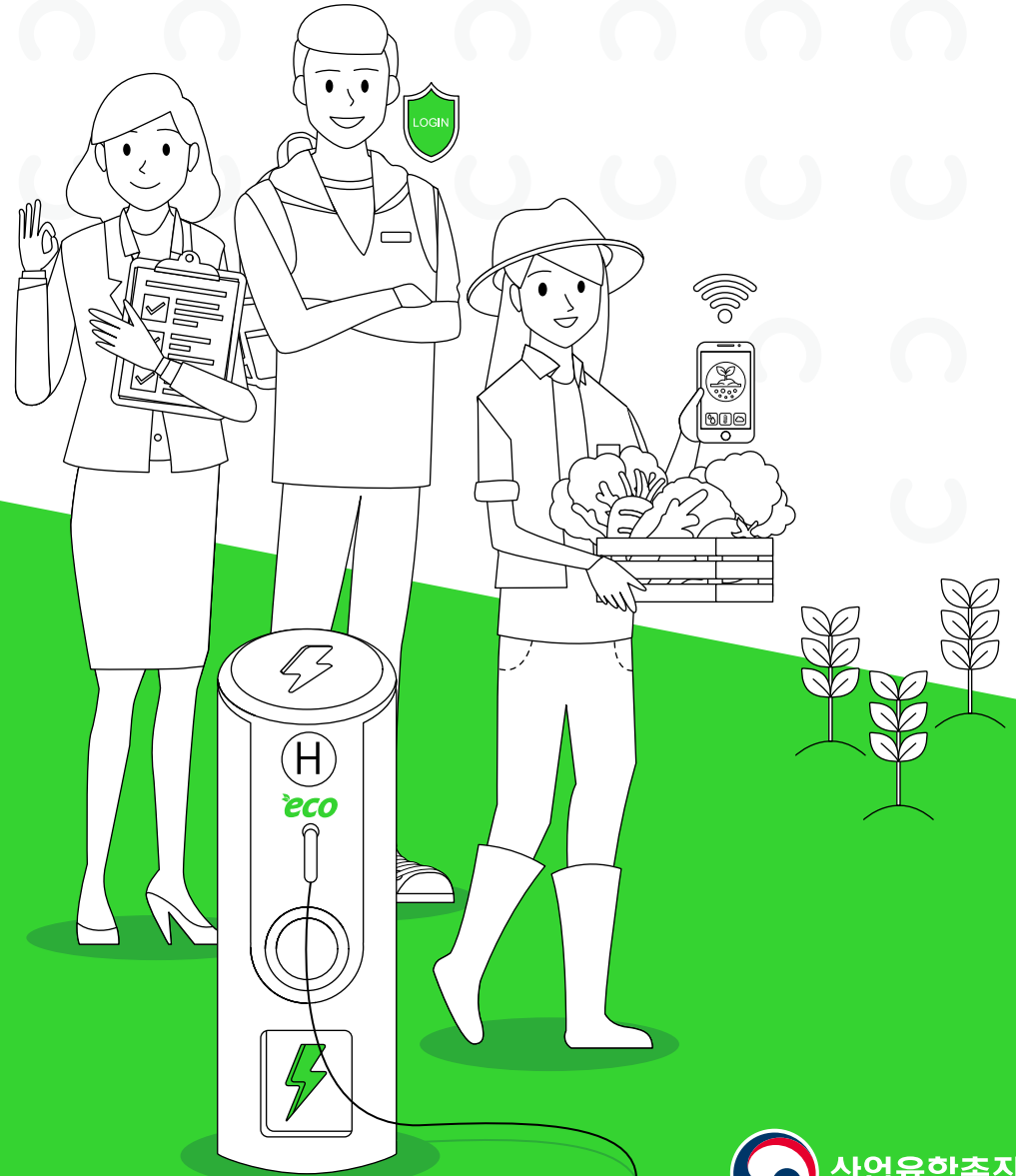


INDUSTRIAL
CONVERGENCE
OMBUDSMAN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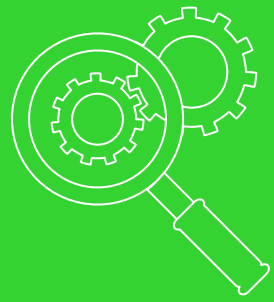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사례집



비매품/무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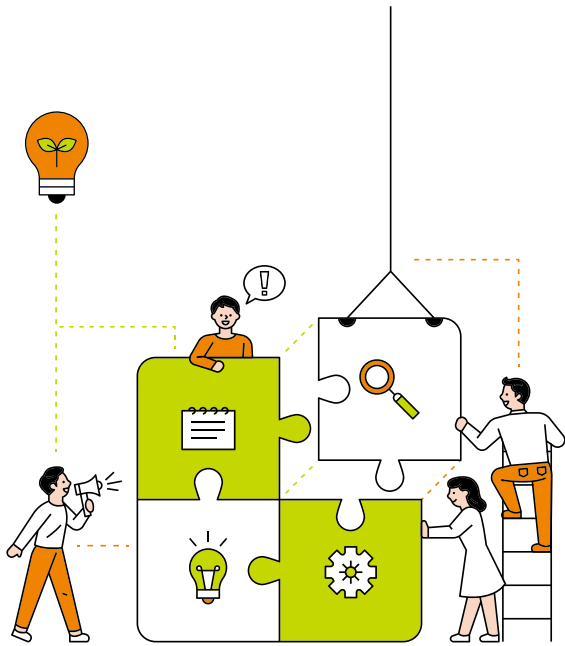
(주)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향기물로 143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Tel : 1670-9050 Fax : 031-8040-6780 <http://oico.kr>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사례집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사례집



CONTENTS

04

발간사

06

제도 소개
문의 방법

10

제도운영 현황
 - 융합산업 고충처리 지원 활동
 -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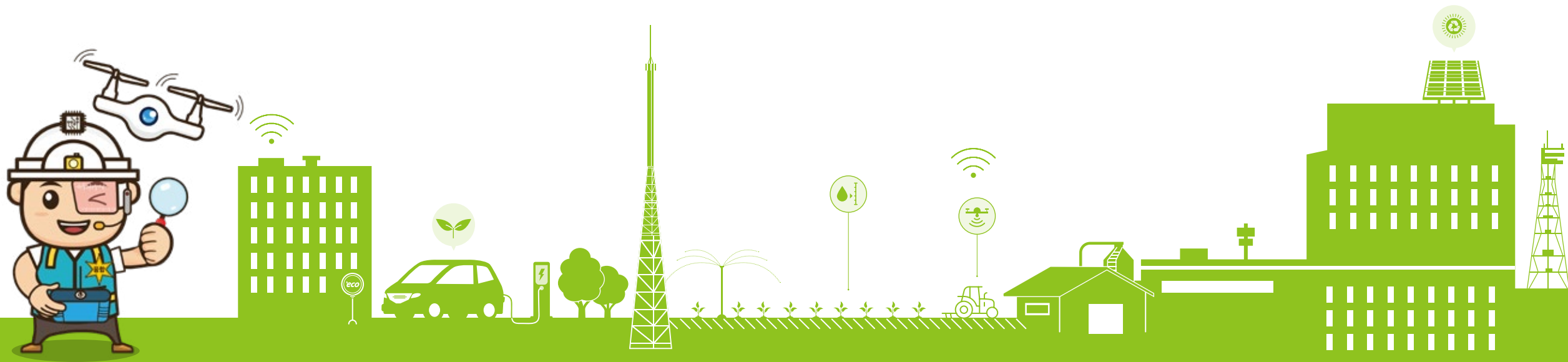
주요 규제혁신 성과 사례

34

규제혁신 모니터링

38

유튜브 채널 운영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유튜브 채널 운영
 - 유튜브 업로드 현황
 - 유튜브 썸네일 및 주요장면





기업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김진웅

안녕하십니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김진웅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 기업들은 산업간 창의적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산업융합 촉진법(2011년)을 제정하였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어 국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행 9년차를 맞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업현장 방문, 규제실태조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제도는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에는 연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애로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안의 제도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시장적 가치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로드맵 개발 및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신산업 분야별 미래 신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성과사례집은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활동 및 규제 개혁 현황을 산업별로 분류하여 실었습니다. 규제·애로 발굴과 분석, 개선된 내용을 사례위주로 담아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국가 신산업 기업들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소개

법적 근거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고충처리 역할 수행

역할 소개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란?

융합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입니다.

법적 근거 >

법에 규정된 역할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 산업융합 관련 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및 해소
- 산업융합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장에게 개선 권고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안건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 상정

주요 활동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1 현장 속 '찾아가는 옴부즈만'

-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규제·애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한 폭넓은 산업융합 규제·애로 발굴



2 산업융합촉진 전문가 워크숍

-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실행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실시



3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 친환경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R&D단계부터 시장출시에 대한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연구
- 신산업 분야별 단계적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및 개선 이행



4 신산업 규제개선 및 이행실태 점검

-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를 조사 및 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규제부처와의 협의 및 개선 권고
- 권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지원

협력 체계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찾아가는 옴부즈만(현장순회 간담회)
- 융합 규제 전문가 워크숍 및 심층분석
- 규제 혁신 후 모니터링

<p>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지원 • 애로사항 관련 기술·제도 검토 지원 	<p>규제특례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 관련 정책 심의·조정 등 • 융합신산업 지원
<p>관계·유관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해소 협력 • 규제해소 네트워크 	<p>산업통상자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혁신과제 지원 •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마련 협력
<p>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 기업 애로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기구 	<p>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 애로접수

지원 기구 >

지속성 있는 융합 규제 애로 발굴 및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 운영

- ☑ **배경**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상시적 추적 관리가 가능한 규제평가 및 혁신 체계의 구축이 필요
- ☑ **기능** 신산업 규제 애로를 상시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민관 소통의 호민관' 역할
- ☑ **구성** 융합신산업 분야 대상, 9대 분과의 위원장 및 위원 90명, 운영자문위원 10명 등 총 100명의 위원 구성

inquiry method

문의 방법



융합신산업·신기술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고충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TEL : 031-8040-6407 | Home page : www.oico.kr



System operation status | 제도운영 현황

융합산업 고충처리 지원 활동

2020년 규제·애로 발굴 활동



▶ 기업현장 방문

20회



▶ 산업융합촉진 전문가 워크숍

* 바이오헬스 분야(코스메틱, 소재·장비), 로봇 R&D 현장, 에너지신산업 분야, 무인이동체 분야, 친환경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

7회



▶ 정기조사

* TP/산단공/생기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 기업 대상

2회



▶ 홈페이지 접수

상시운영

규제·애로 분석

규제·애로 조사 및 분석

* 처리유형 분류

법·제도 개선

신속시장출시 지원

맞춤형 고충상담

규제개선 전략 수립

*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에서 지원

규제·애로 개선



규제부처 협의



국조실 등에
안전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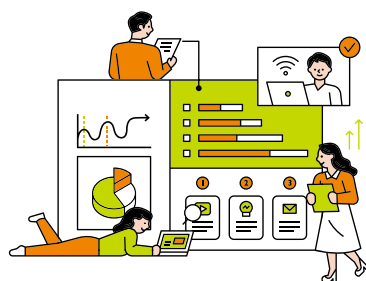
규제샌드박스
연계



사업 일반애로
맞춤형 상담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로드맵 수립 개요



신산업 분야 핵심 산업군을 대상으로 현행 기준의 규제관련 법령 조사 및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 도출을 통해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이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정비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 로드맵

로드맵 수립 성과

- 1 친환경차 분야 기술 발전 시나리오 도출
- 2 친환경차 분야 규제 관련 법령 조사
- 3 규제개선 과제 발굴
- 4 규제개선안 마련 및 로드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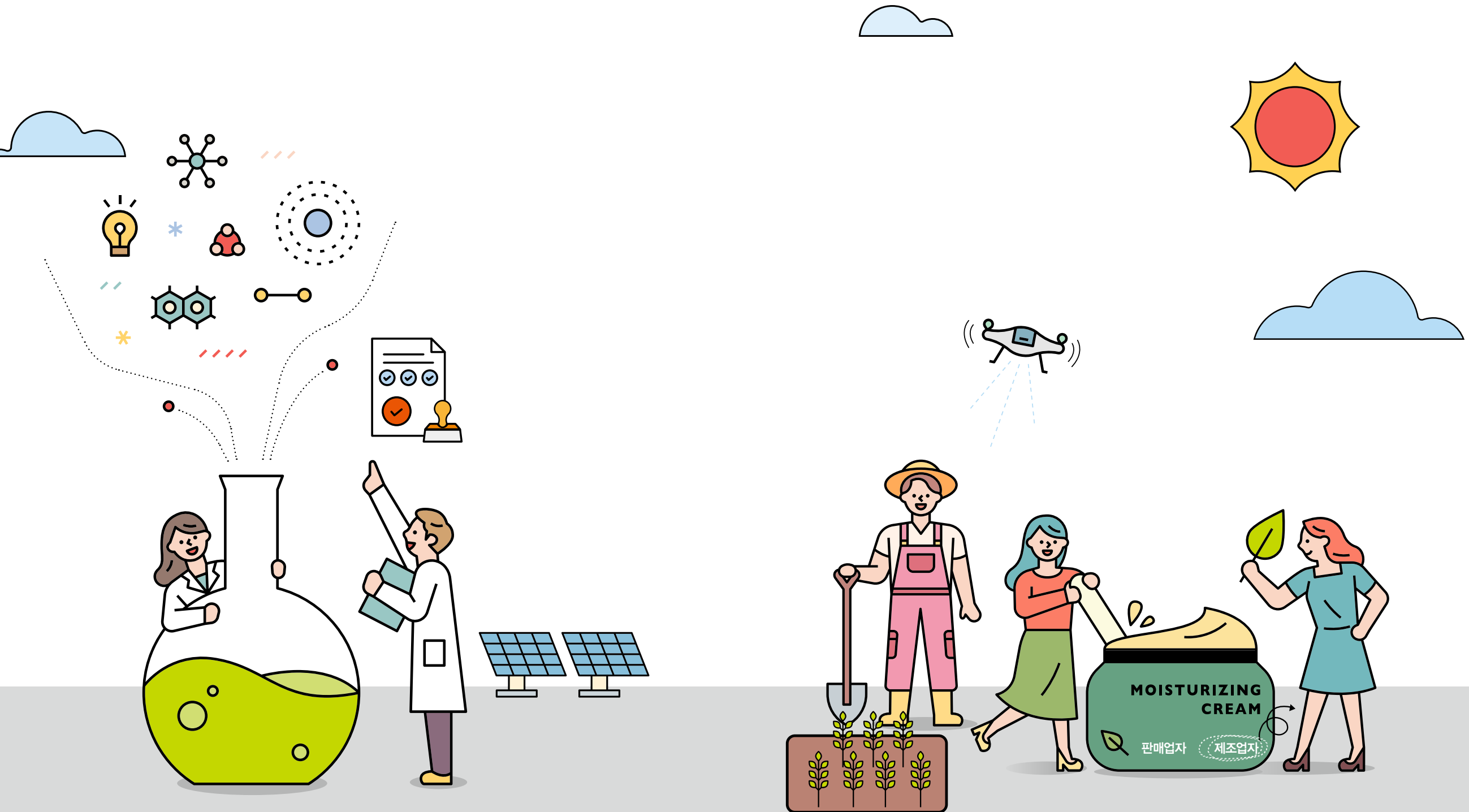
5 **정책반영**
-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20.4)
* 10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Major Achievements

주요 규제혁신 성과 사례

산업융합촉진 ombudsman 제도는 융합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산업융합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의 산업융합촉진 ombudsman의 성과 및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으로 연구가 더욱 수월해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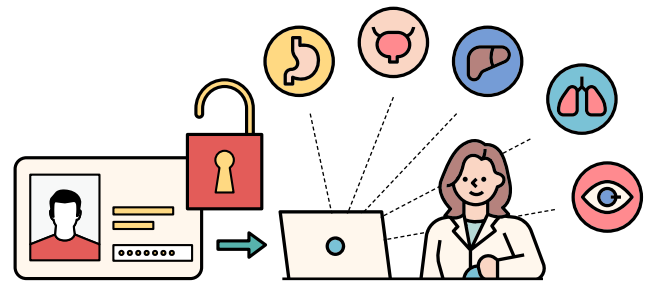
인체유래물 분양 시 개인식별정보 제공 허용 요청

▶ 바이오헬스 분야

애로내용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관련 임상정보 데이터를 연계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인체유래물과 임상정보 데이터의 매개 역할을 하는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연구진행의 어려움 발생
-------------	---

개선내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9 940 723 1216"> 개선 전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서식에 연구자 등에게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td> <td data-bbox="723 940 1168 1216"> 개선 후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서식 내 연구자 등에게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선택 양식 추가 </td> </tr> </table> <p>• 인체유래물은행에서의 서식 내 동의 항목 추가 예정(~'21) 소관부처 : 복지부 필요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p>	개선 전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서식에 연구자 등에게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개선 후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서식 내 연구자 등에게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선택 양식 추가
개선 전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서식에 연구자 등에게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	개선 후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서식 내 연구자 등에게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선택 양식 추가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유래물과 개인식별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해 특정 질병의 연구 등 정밀한 의학 연구가 가능
----------------	--



대리인 서면동의, 이제 패~스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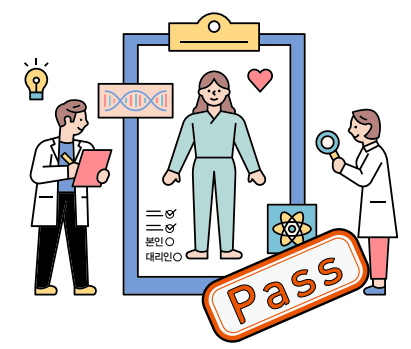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대리인 서면동의 면제 허용

▶ 바이오헬스 분야

애로내용	생명윤리법상에서 명시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범위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획득하기 어려운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동법에서 '대리인의 서면동의'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수행 가능한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범위에 제약이 발생
-------------	--

개선내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671 940 2118 1216"> 개선 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본인의 서면동의는 면제되나 대리인의 '서면동의 획득'이 반드시 요구 됨 </td> <td data-bbox="2118 940 2539 1216"> 개선 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 획득이 면제됨 </td> </tr> </table> <p>• 생명윤리법 개정 예정(~'22) 소관부처 : 복지부</p>	개선 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본인의 서면동의는 면제되나 대리인의 '서면동의 획득'이 반드시 요구 됨	개선 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 획득이 면제됨
개선 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본인의 서면동의는 면제되나 대리인의 '서면동의 획득'이 반드시 요구 됨	개선 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 및 대리인의 서면동의 획득이 면제됨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 연구 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 다양한 의학적 연구 등이 가능
----------------	---



문제가 되는 제조업자 표기, 그대로 둘 것인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자에 관한 정보 표기 자율화

▶ 바이오헬스 분야

애로내용	화장품 포장에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 정보가 함께 명시됨에 따라 제조업자 정보를 통해 유사제품을 쉽게 제조하고 해외에 유통되는 등 책임판매업자의 피해사례 발생
------	--

개선내용	개선 전 화장품 포장에 책임판매업자 외 제조업자 정보가 함께 명시 되어야 했음	개선 후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 예정
	•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발의('20.9.16) 완료 및 법개정을 위한 작업 추진 예정 소관부처 : 식약처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방상품 제조가 어려워짐으로써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가 상생 성장할 수 있는 화장품업 구도로 전환 다양한 화장품 제품의 개발 및 활성화 가능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 미투 제품의 난립, 수출 가격 인하 요구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피해 방지
---------	---



다양한 욕창예방방식, 나에게 맞는걸로 골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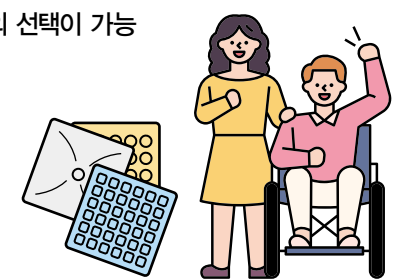
다양한 욕창예방방식에 대한 인증

▶ 바이오헬스 분야

애로내용	현재 욕창예방방식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KS표준을 준수한 제품을 구매해야하나, KS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욕창예방방식의 형태가 한정적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욕창예방방식을 개발하더라도 KS표준의 부재로 보험급여 적용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 발생
------	--

개선내용	개선 전 KS표준에서 지정한 공기패드형 욕창예방방식에 대해서만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공기패드형태 외의 방식은 장애인보조기기로써 욕창예방방식 시장 진출이 어려움	개선 후 의료기기로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해 짐으로써 다양한 욕창예방방식의 판매·보급이 가능
	• 표준 개정 절차에 따라 산업표준(KS) 개정 예정(~'21) 소관부처 : 식약처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욕창예방방식이 판매·보급 됨으로써 장애인 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장애인 스포츠 선수, 활동적인 장애인, 장시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여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알맞은 방식의 선택이 가능
---------	--



음성 원본정보 필수 동의로 연구의 질이 달라졌어요!^_^

스피커의 음성 원본 정보의 수집·이용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운영 필요

▶ IoT 분야

애로내용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17년, 방통위)은 바이오 정보의 '특징정보' 분석 후 '원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음성 원본정보를 활용한 연구 및 기술 고도화의 어려움 발생
------	---

개선내용	개선 전 음성정보 관련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알고리즘이 등장할 때마다 원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했음	개선 후 「바이오 정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내용은 유지하되, 기존의 선택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전환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21.上)	소관부처 : 방통위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 원본정보 수집을 통해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 해외 서비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 가능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 <p style="font-size: x-small;">※ AI 스피커 시장규모(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 ('17) 25억불(약3조원) → ('22) 87억불(약10.4조원)</p>
---------	---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이제 빨라질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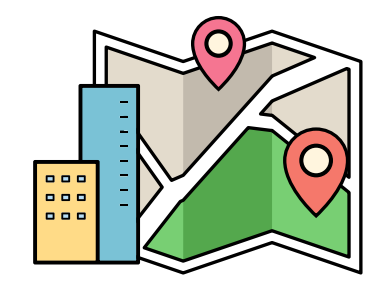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

▶ IoT 분야

애로내용	위치정보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정의를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치정보가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가 요구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및 인력 소모, 해당 서류 대응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발생
------	--

개선내용	개선 전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 4주 소요	개선 후 위치정보 활용 창업준비자 등의 신고 절차 부담 완화 및 신속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지원센터'(신고 절차 안내,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홍보 등) 지원 기능 강화
	· 관련 상담센터 홍보 활성화 및 업무대응 인력 보강을 통한 신고 처리기간 단축('20.12)	소관부처 : 방통위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정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 → 처리기간 50% 단축(4주 → 2주) IT 사업자들이 부수적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가능
---------	--



간편한 청소년 본인 인증, 그렇다고 모든 게 호락호락하진 않다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본인인증방법 개선과 다양화

▶ 정보보안·인증 분야

애로내용	현재 청소년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기관의 인증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인증 등은 법률상 청소년 본인인증 수단으로 인정 되지 않는 실정
-------------	---


개선내용	개선 전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의 인증 외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있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인증 방법에서는 제외 됨	개선 후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의 인증 이외에 본인인증수단인 민간 사설 인증서가 인정됨으로써 사실 본인인증수단이 청소년 보호제도 상 나이 및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
-------------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20.12)

소관부처 : 여가부

개선/ 파급효과

- 다양한 민간 사설 인증서가 청소년 보호제도 상 나이 및 본인확인방법으로 인정
- 본인인증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청소년 나이 인증이 간편해 짐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용이



유연한 제품심사 관리로 이렇게 편리해질 수 있다니!

ESS 이차전지 단체표준 인증 시, 他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인정 요청

▶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내용	ESS 이차전지설비에 대해 한국전지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 시, 동일한 인증규격으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인정해주지 않아 동일한 시험을 다시 진행하기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과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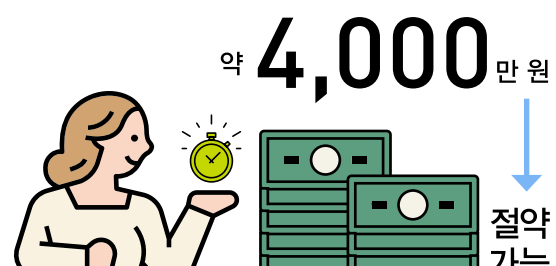
개선내용	개선 전 ESS 설비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축전지(이차전지)에 대해 고효율인증서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취득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 후 인증심사 신청 기업이 동일한 단체표준 규격에 대해 他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이미 보유 할 시, '제품심사'를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로 갈음하여 인증심사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	--

• '20.4월 內 한시적으로 단체표준(SPS-C KBIA- 10104-03-7312/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 이차 전지시스템) 인증 시 他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인정

소관부처 : 산업부/ 한국전지산업협회

개선/ 파급효과

- 제품심사(시험)비용 약 4천만 원 절약 가능
- 해당 업계의 행정부담 완화 및 시간절약



국내 인증을 위해서 인증 비용을 한 번 더 부담하더니요?!

해외에서 취득한 인증을 국내 KC인증으로 변환 시, 인증비용 감소 필요

▶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내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해외에서 취득한 인증을 국내 KC인증으로 상호인정* 받고자 할 경우, 비용이 시험을 수행할 때와 동일하게 청구되어 기업 비용부담 가중 * 국내외의 기관 간 상호인정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는 해외에서 既시험·인증한 항목에 대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

개선내용	개선 전 ESS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KC인증 신청 시, 해외에서 취득한 CB인증서를 제출해도, 국내 인증기관에서는 해외에서 CB인증서 취득을 위해 既시험·인증한 항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모두 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	개선 후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ESS용 리튬이차단전지 및 ESS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한 CB인증을 KC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한하여 1년간 수수료 70% 인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S용 리튬이차단전지 등 에 대한 CB인증을 KC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한하여 1년간 수수료 70% 인하 적용(’20.5~’21.4) 	소관부처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비용 중복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 경제에 도움이 됨 인증서 전환 비용 70% 감소
---------	---

태양광 발전소에 안전관리 대행사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자 상주 고용 기준 완화

▶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내용	전기설비 용량 1MW 이상, 3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위험 수준 대비 규제비용 부담 과중
------	---

개선내용	개선 전 전기설비 용량 1MW 이상, 3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도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함	개선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안전 관리 대행사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12.2)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 예정(~’21.4.1) 	소관부처 : 산업부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익성 증대 예상 안전관리 인건비가 1.5MW 당 평균 350만원/월 → 120만원/월 소요 안전관리 대행사 이용시 평균 65.79% 비용 절감 효과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확대 예상
---------	---

전력생산 후 남는 잔여전력을 직거래 할 수 있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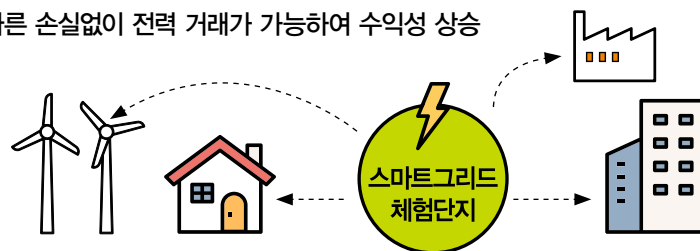
마이크로그리드 P2P 사업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에너지산업 분야

애로내용	전력생산 대상 건물이 전력 생산 후 사용하고 남은 잔여전력을 근거리의 건물 혹은 개인에게 거래 하려면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어, 잔여전력을 전력회사에 송전하는 동안 전력 손실 및 에너지 변환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이 떨어짐
------	--

개선내용	개선 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 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여만 거래가 가능	개선 후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개인간, 건물간 또는 산업 단지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방안 마련 예정
	• 향후 옴부즈만의 제안사항과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실증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증사업 이후 법령정비 방안 마련 예정(~'22) 소관부처 : 산업부	

- 개선/ 파급효과**
- 송배전 비용절감, 피크저감 및 에너지 소비 관리, 분산그리드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화 가능
 -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아 개인이 생산한 전력 중 사용 후 남은 전기가 이동에 따른 손실없이 전력 거래가 가능하여 수익성 상승



빠빅- 스마트팜 시설 운용 로봇도 이제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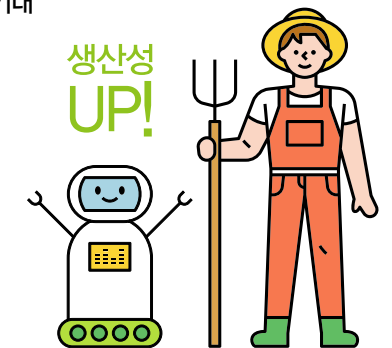
스마트팜시설에서 농업용 로봇 산업안전보건 및 성능인증 기준 마련

▶ 로봇 분야

애로내용	산업용 로봇은 지정위치에 로봇이 설치되거나, 주위 공간 확보가 가능한 반면, 스마트팜시설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주로 좁은 공간에서 사용됨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로봇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없음
------	--

개선내용	개선 전 스마트팜 시설에서 사용하는 로봇에도 기존 산업용 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해서 현실적 운용의 어려움이 존재함	개선 후 스마트팜 시설에 알맞게 운용 가능한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예정
	•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자체적으로 한국산업 표준(KS B ISO 10218-2)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제공 예정(~'22, 고용부)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제3자 인증이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기준 마련 예정 (~'21) 소관부처 : 고용부/농림부	

- 개선/ 파급효과**
- 로봇 활용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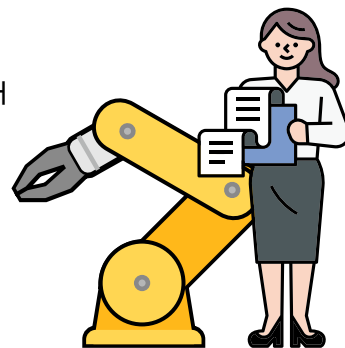
똑똑한 건설 로봇, 이제 맘 놓고 사용해 봅시다!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제어

▶ 로봇 분야

애로내용	기술적으로 건설 로봇은 원격제어를 통해 건설 현장 등에서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안전성 우려로, 상용화 및 서비스의 어려움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건설 로봇 원격조작 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부재하여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 수행 할 수 있음에도 상용화 불가	개선 후 건설 로봇 원격조작 면허 발급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건설 로봇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관련 보험제도 신설 검토 예정
	• ①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예정 (’21~, 국토부) 소관부처 : 고용부/산업부/국토부 • ② 실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기준 개발 예정(~’23, 산업부) • ③ 등록·형식기준, 조종사 자격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25, 국토부)	

- 개선/파급효과**
- 원격제어 건설로봇의 안전성 확대
 - 원격제어 건설로봇의 시장 창출
 - 관련 자격증 시장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이제 굴삭기도 수소연료전지로!

수소건설기계(굴삭기) 시장출시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수소전기차 분야

애로내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는 연료전지팩의 수소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수소연료전지 '굴삭기'의 경우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부품 사용을 요구하는 국내 사전규제 성격상 연료전지팩 설치 불가	
개선내용	개선 전 수소건설기계는 지게차 및 굴삭기를 중심으로 상용화 개발 중이나, 굴삭기의 경우 별도의 안전기준 규정이 부재	개선 후 지게차 안전기준과 연계하여 굴삭기 기술기준 마련 예정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23) 소관부처 : 국토부	

- 개선/파급효과**
- 지하 및 도시공간 작업 시 매연 未배출 및 소음 저감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 발생
 - 수소연료전지 굴삭기가 디젤 굴삭기 대비 에너지 비용 개선율이 23% 더 우수, 추후 수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할 예정
 (디젤 : 시간당 2.96L 소모 [가격 1,400원/L]
 수소 : 시간당 0.3kg 소모 [가격 8,000원/kg])



지역과 거리에 따라 수소 판매 가격이 균등하니까 좋다!

수소 공급 적정가격 관리

▶ 수소전기차 분야

<p>애로내용</p>	<p>수소 생산지역이 제한적이고 생산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되어 지역별 수소 판매가격이 최대 2배 차이가 생김으로써 수소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경우 소비자의 수소차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수소차의 적정 대수가 유지되지 않아 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으로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수소차의 전국적 이동성을 제약</p>	
<p>개선내용</p>	<p>개선 전</p> <p>지역별 수소 판매 가격이 다름으로 인해 초기투자비 및 수소유통자금 부담으로 수소충전소의 단기적인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한계 발생</p>	<p>개선 후</p> <p>수소법 제정('20.1)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을 한국가스공사로 지정('20.7)하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관리 수행</p>
<p>• 수소경제법 제정 ('20.1) 소관부처 : 산업부 • 수소유통전담기관 한국가스공사로 지정('20.7)</p>		
<p>개선/파급효과</p>	<p>• 수소경제 초기단계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유통관리 일원화를 통해 전국적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수소가격 수준 균등화에 기여</p>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로 수소충전소 설치도 더 확대 될거예요!

기존 수소충전소에 가스충전소 또는 주유소 설치시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 특례기준 적용

▶ 수소전기차 분야

<p>애로내용</p>	<p>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를 적용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부지비용, 건축비 및 운영비 등이 추가로 지출</p>	
<p>개선내용</p>	<p>개선 전</p> <p>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시 이격거리 등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나 신규 융·복합 충전소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함</p>	<p>개선 후</p> <p>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는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p>
<p>•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20.6) 소관부처 : 산업부</p>		
<p>개선/파급효과</p>	<p>•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 촉진,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 및 운영비 절감 • 진·출입로 등 부지면적 약 50% 감소, 사무실 건축비 약 30% 절감, 안전관리자 인건비 4천만원/년 절감</p>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받기 힘든 이유가 평가 항목 때문이었어?

친환경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 항목 개선

▶ 기타 분야

애로내용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 결정 항목이 농산물 위주의 인증 농가수와 매출 위주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 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개선내용	개선 전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개선 후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세부사항 내 '지표' 항목에 인증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대 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방식 전환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 소관부처 : 농림부 (20.12)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의 평가항목이 개선됨으로써 공정성·전문성·책임성이 강화 다양한 친환경 인증 평가가 가능 20년 기준 친환경 인증 개수 136개 → 21년 기준 예상 친환경 인증 개수 157개 (약 15.4% 증가 예상)
---------	---



까다로운 직접생산확인 서류 제출은 이제 그만~!

직접생산확인 서류 발급 요건 완화

▶ 기타 분야

애로내용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시 일부 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토록 운영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불가
------	---

개선내용	개선 전 제출서류 중 일부는 직접생산확인 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함	개선 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를 지침에 고시한 대로 직접생산확인 조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라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예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예정(~21) 소관부처 : 중기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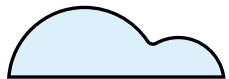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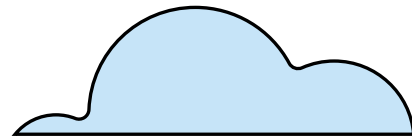
개선/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서류 유효 기간의 증대로 서류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감소
---------	--



Monitor regulatory innovation

규제혁신 모니터링

향후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집중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산업융합 규제개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도, 융합 관련 규제애로 경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합니다.



규제개선 완료 기업 대상 모니터링

추진배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효성 확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 모니터링 수행

조사기간·방법

'20.5.11(월) ~ 6.23(화) / 이메일 및 유선 조사

조사대상

'15년도 ~ '19년도 내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20.4.30 기준 개선 완료된 과제 63건

조사내용

규제개선 과제별 체감도, 만족도, 규제개선 대응절차 보완점, 신규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

추진결과

규제개선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 결과

(점수 평균/응답유형별 집계)

연도(과제수)	조사결과 (조사대상 : 63건)	도표
규제개선 과제별 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음 : 34건(77.3%) ● 보통 : 3건(6.8%) ● 낮음 : 7건(15.9%) 	77.3% 6.8% 15.9%
규제개선 과제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음 : 36건(80.0%) ● 보통 : 4건(8.9%) ● 낮음 : 5건(11.1%) 	80.0% 8.9% 11.1%

* 미응답건은 비율 산정 시 제외

활용방안

- 우수성과는 성과 확산 기반 자료로 활용
- 체감도 및 만족도가 낮은 과제는 현황 재검토를 통해 애로해소 지원

관련 보도



신기술 기업 대상 규제·애로 현황 모니터링

추진배경

산업융합 관련 지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산업계 규제·애로 현황 및 관련 지원 제도의 인식 현황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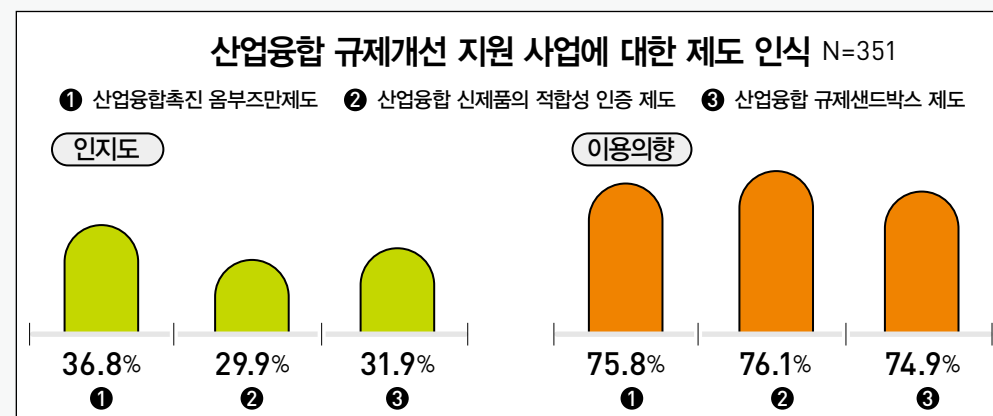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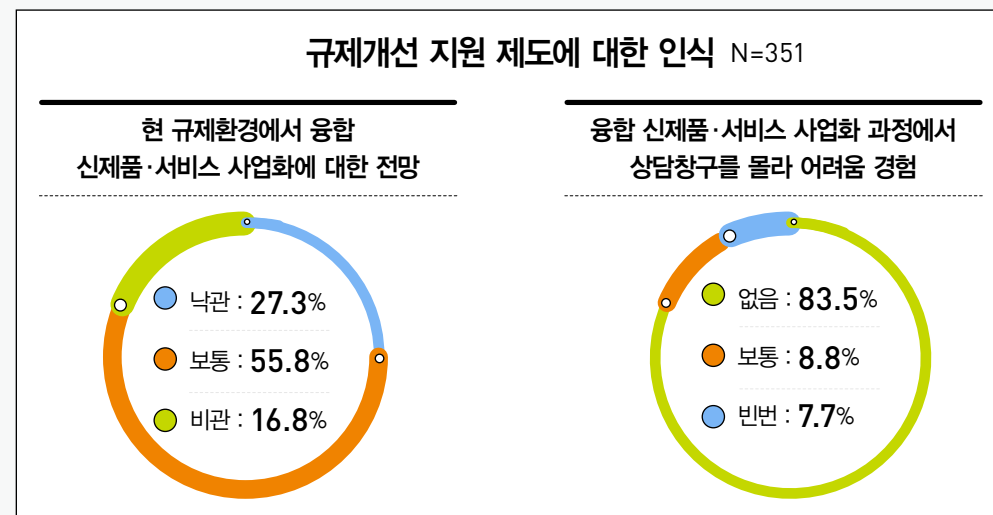
조사기간·방법·대상

'20.11.4 ~ '20.11.13 / 온라인, 전화, 이메일 등 복합조사 / 신기술 개발 기업 351개 사

조사내용

융합 신산업 규제인식 현황 및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규제 애로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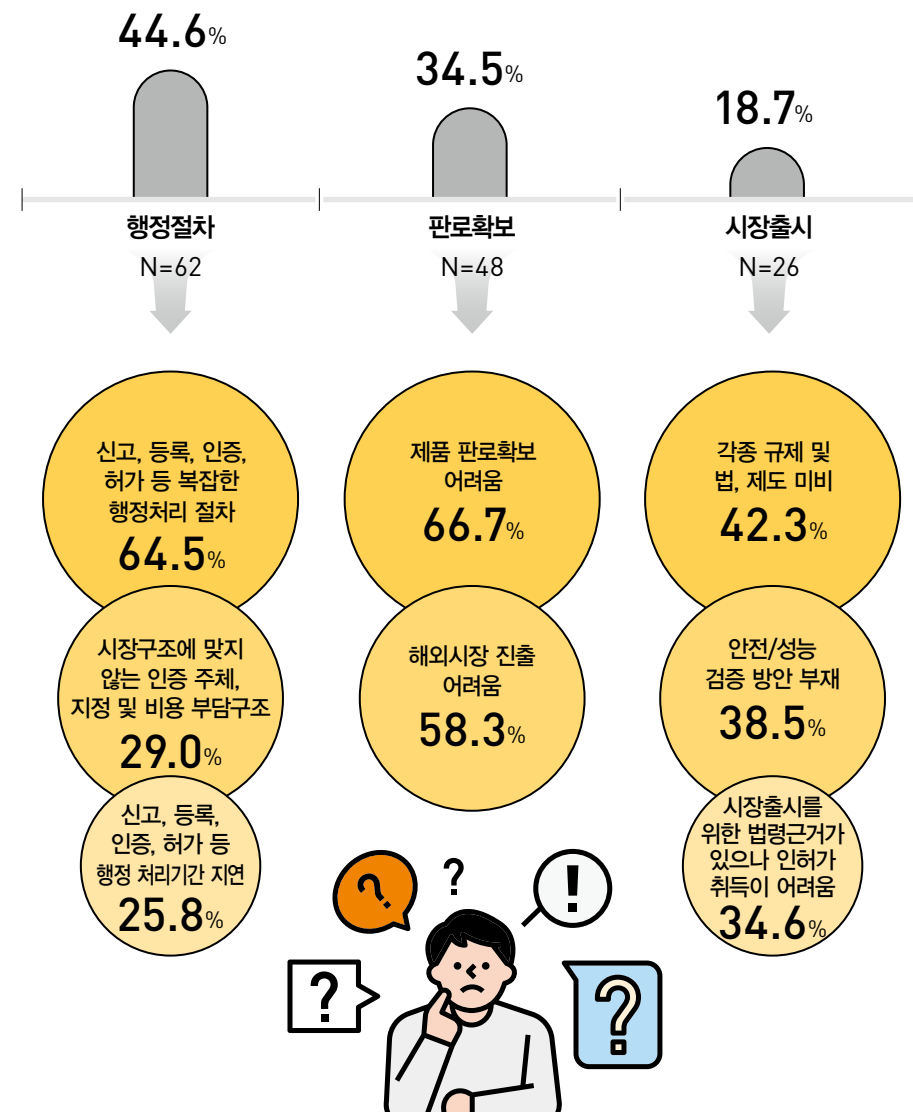
조사결과 요약



융합 신산업 규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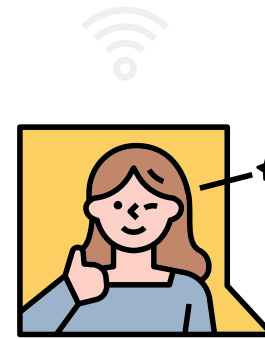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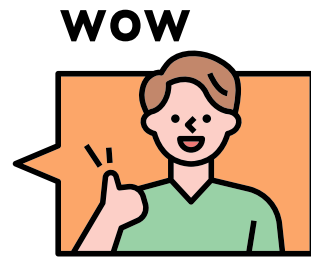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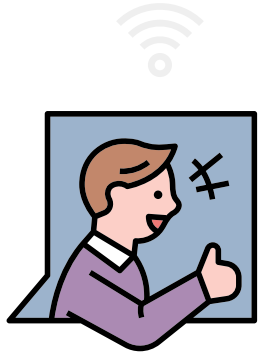
애로사항 경험 분야 및 유형 TOP 3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운영

기업방문에 대한 한정된 기회를 극복하고 기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한 회사의 규제 개선 극복 사례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불합리한 규제 극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도와줘! 옴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및 관련 영상들을 소개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유튜브 채널 운영

(’20.10 ~ ’21.2)

도와줘! 옴즈!

시즌1 총 12화 구성



규제 개선 극복 사례를 알고 싶다면!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유튜브 업로드 현황

바로 연결하고 싶다면!



회차	내용	대상	유튜브 큐알코드
1화	• 옴부즈만 제도 소개 및 옴부즈만 인터뷰	-	
2화	• 전기차 충전기 분야 기업 애로 현황 및 규제 해소사례	차지인	
3화	• 전동휠체어에 대한 애로 현황 및 규제 해소사례	(주)알에스케어 서비스	
4화	• VR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애로 현황 및 규제 해소사례	빅픽처스(주)	
5화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의 애로 현황 및 규제 해소사례	SY에너지(주)	
6화	• 신산업 법·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전문가 인터뷰	이종영 교수님	
7화	•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대한 기업 애로 현황 및 규제 해소사례	엔에이치엔페이코(주)	
8화	• 친환경차 분야 규제로드맵 및 산업 현황 관련 전문가 인터뷰	김필수 교수님	
9화	• IoT 교통안전 설비(터널 내 사고감지 레이더) 분야 기업 애로 현황 및 규제 해소사례	메타빌드(주)	
10화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전문가 인터뷰	길홍근 사무총장님	
11화	• 현옴부즈만 활동 현황 인터뷰	김진웅 옴부즈만	
12화	• 산업융합 지원 정책 소개 및 기업의 옴부즈만 제도 이용 소감 소개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	

유튜브 썸네일 및 주요장면

썸네일

주요장면

1화



썸네일

주요장면

5화



2화



6화



3화



7화



4화



8화





썸네일

주요장면

▶ 9화



▶ 10화



▶ 11화



▶ 12화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발행일
2021. 3

발행처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주소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산업융합촉진 음부즈만
TEL. 1670-9050
FAX. 031-8040-6780
<http://oico.kr>

